

#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과 해소방안: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정 일 영\*\*

- I. 서론
- II.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휴전협정의 체결
- III. 한국전쟁에 관한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
- IV. 역사인식의 간극: 원인과 해소방안의 모색
- V. 결론

## 국문요약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을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고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인식에 있어 상반된 입장을 경주해 왔다. 이 논문은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국전쟁을 분석하고 그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과 북의 역사서술에 있어 가장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① 전쟁의 원인, ② 전시폭력, 그리고 ③ 휴전체제의 성립에 관한 남북 공간문헌의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전쟁의 원인에 있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침략을 주장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의 동의하에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역사서술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전시폭력에 있어 남한은 전쟁의 참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양민학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북한은 모든 폭력의 당

사자로 '미제국주의'를 지명하고 이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휴전체제의 성립에 대하여, 남한이 '승자 없는 종결'로서 휴전체제를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의 지속이란 과제를 강조한 반면, 북한은 '김일성의 영도'하에 이루어낸 '승리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역사인식이 지속됨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한반도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가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한국전쟁에 관한 교육에 있어 전쟁사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한국전쟁, 역사인식, 전시폭력, 휴전체제, 평화체제

\* 이 논문은 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15』(Aug 25, 2015)에서 발표된 필자의 논문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과 해소방안: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서술을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I. 서론

이 논문은 근대 이후의 한반도 역사에서 남북이 가장 이질적인 역사인식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전쟁<sup>1</sup>에 관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북의 역사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간극을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왜 해소되고 있지 않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연구질문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역사에 관한 남북 간 학술적 교류는 일부 분야에 제한되어 왔다. 특히 근현대사에 관한 역사 교류는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과 같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은 남북 간 역사인식에 있어 그 간극이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다. 이와 같은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으며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을 어찌면 당연히 하는 학문적 풍토는 분명 지양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해에 있어 남북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간극을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학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을 분석한 연구로 임시정부에 관한 남북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양정훈의 연구와 한국전쟁 이후 ‘국가보훈’에 관한 남북의 인식을 분석한 강석승의 연구, 그리고 노태우 정부시기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 간 상호인식의 변화를 연구한 윤철기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2</sup>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이 왜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성보와 이영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성보는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을 분석하고 당시의 ‘인간개조’ 경쟁이 냉전형 반미/반공주의 인간을 만들어 내는 작업과 긴밀히 연관되어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이영미는 탈북이주민이 남한에서

<sup>1</sup> 현재 남한학계에서는 ‘한국전쟁’과 ‘6·25전쟁’을 혼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1994년 이후 교과서에 ‘6·25전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전쟁’을 사용하고자 하나 ‘한국전쟁’ 또는 ‘6·25전쟁’ 용어의 사용에 관한 학계의 논쟁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명섭,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2호 (2009) 참조.

<sup>2</sup> 양정훈 “임시정부에 대한 남북한의 견해 차이 비교,” 『한국보훈논총』, Vol. 12 No. 4 (2013); 강석승, “남북한의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과 그 특성 비교,” 『북한학보』, 제37권 1호 (2012); 윤철기, 구갑우, “남북한 대화에서 남북한의 상호인식 변화: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Vol. 9 No. 1 (2013).

<sup>3</sup>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Vol. 53 (2014).

겪는 트라우마의 심층을 ‘역사적 허구’와 ‘허구적 역사’라는 연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sup>4</sup> 관련하여 차승주, 김형곤, 그리고 조성훈 등의 연구자들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북의 인식을 교과서 등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sup>5</sup>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역사인식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 연구로는 김한중, 이준태, 그리고 정태현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6</sup> 김한중은 역사적 인식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화교육으로서의 전쟁사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준태는 통일이후 민족정체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교육의 강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태현은 연장선상에서 남북 역사학(자)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과 북의 역사인식을 분석함에 있어 한국전쟁을 기술한 남과 북의 역사교과서와 정부발행 역사서 및 개론서와 기타 남북의 관련 공간자료집을 1차 자료로 활용한다. 역사인식은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통해 분석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남과 북의 역사서술에 있어 가장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① 전쟁의 원인, ② 전시폭력, 그리고 ③ 휴전체제의 성립에 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민들의 인식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의 인식변화도 추적하고자 한다. 남한의 경우 정부기관의 공간자료를 통해 국가적 역사인식을 분석하고 학계에 존재하는 주요 논쟁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남한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장에 이어 II 장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휴전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III 장에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남

<sup>4</sup> 이영미, “정치인식의 탈경계 문화 충돌: 남북한 이주 갈등과 역사 인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Vol. 29 (2010).

<sup>5</sup> 차승주, “남북한 교과서의 ‘한국전쟁’ 관련 내용 비교 연구,” 『북한학연구』, Vol. 7 No. 2 (2011); 김형곤, “역사교과서와 한국전쟁 사진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1 No. 6 (2011); 조성훈, “북한의 6·25전쟁인식과 통일을 위한 유산 청산,” 『선진화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10).

<sup>6</sup> 김한중, “평화교육과 전쟁사,” 『역사교육연구』, No. 18 (2013); 이준태, “남북한 역사교육 분석을 통한 역사인식 통합 방안모색,” 『아태연구』, Vol. 16 No. 2 (2009); 정태현, “남북 역사학(자) 교류와 역사인식의 공존을 향한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Vol. 12 (2009). 추가적으로 김상무는 독일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 간 역사교육 분석에 좋은 비교연구가 되리라 판단된다. 김상무, “동독과 신연방주 역사 교과서의 분단사 서술 비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Vol. 16 No. 3 (2010).

북의 역사적 인식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IV장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인식의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이 연구가 갖는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겠다.

## II.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휴전협정의 체결

### 1. 해방 이후의 국제정세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한반도는 해방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였다. 남과 북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국은 500여명의 주한 미군 군사고문단을 남기고 1949년 6월 철수하게 된다.<sup>7</sup> 이후 동북아에서의 정세변화는 소위 애치슨라인(Acheson Line)의 설정과 중국의 공산화로 급변하였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부장관 애치슨은 ‘아시아의 위기(Crisis in Asia)’라는 연설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선(defensive perimeter)을 알류산 열도-일본본토-류쿠(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임을 확인하였다. 당시 애치슨의 이와 같은 발언이 미국의 대소련 방어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극동지역의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애치슨의 해당 연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극동지역) 방어선은 알류산 열도(the Aleutians)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the Ryukyus)로 연결된다. … 방어선은 오키나와로부터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 (방어선 밖에 있는) 태평양의 다른지역에 대한 군사안보와 관련하여, 아무도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sup>8</sup>

미국의 극동지역 방어선 설정과 함께 중국의 공산화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장정(大長征)을 성공으로 이끈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중국의

<sup>7</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116~119.

<sup>8</sup> “So far as the military security of other areas in the Pacific is concerned, it must be clear that no person can guarantee these areas against military attack.” Dean Acheson, “Speech on the Far East,” <<http://teachingamericanhistory.org/library/document/speech-on-the-far-east>> (검색일: 2015.7.1).

공산화는 동북아에서 공산주의 삼각동맹이 구축됨을 의미했다.<sup>9</sup> 중국의 공산화는 소련이 중국의 동의하에 북한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해방이후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북은 스스로 유일 정부임을 강조하며 무력을 통한 통일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북한은 국가건설 이후 국토의 완정을 강조하였다.

“완전 자주독립국가건설과 국토의 완정은 오직 조선인민만이 보장할 것이며 또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전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 주위에 일층 단결하여 국내의 전체 민주역량과 애국적 역량을 더욱 집결함으로써 국토의 완정을 보장하는 거족적 구국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sup>10</sup>

남한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 또한 미국의 지원 아래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사흘 이내에 평양을 점령할 자신이 있다고 단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고 있는 이유는 제3차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미국이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sup>11</sup> 이와 같이 남과 북이 무력충돌을 공공연히 주장하였고 휴전선 인근에서 남북 간에 적지 않은 충돌<sup>12</sup>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았다.

## 2.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한국전쟁의 발발에 관한 남북의 견해는 전혀 상반된 것이지만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동의하에 남한을 침략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소련의 외교비밀문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9월 조선인민군대의 확장과 관련하여 북한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는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무력 통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sup>9</sup>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파주: 나남출판, 1996), p. 133.

<sup>10</sup> 김일성, “1949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1949.1.1),” 『김일성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p. 309~310.

<sup>11</sup>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pp. 29~30.

<sup>12</sup> 1949년 5월 송악산에서 전투가 발생하였으며 7월에는 한국군과 인민군 간에 488고지를 상호 점령하는 과정에서 81mm 박격포가 동원되는 등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120mm 박격포 등 대구경포가 동원된 사격전과 저격이 지속되었다. 홍정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 75~76.

“김일성과 박헌영은 현 상황에서 평화적 방식에 의한 나라의 통일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남조선 정부에 반대하는 무력적 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합니다. … 그들은 지금 비록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통일문제에는 수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sup>13</sup>

결국 1950년 5월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보낸 비밀문서에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북한의 남침에 동의를 표하였다. 스탈린이 보낸 비밀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 동지들과의 회담에서 필리포프(Filippov)와 그의 동지들은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조선의 통일 과업 착수 제안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선과 중국이 함께 내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중국 동지들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sup>14</sup>

소련은 한반도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만약 북한의 의도와 달리 북한이 위기에 처한다면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암시한 것이다.

해제된 소련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0년 6월 조선인민군대가 휴전선에 집결하였다. 조선인민군은 1950년 6월 12일 38선 지역에 집결하기 시작하여 6월 23일 완료하였으며 작전에 대한 모든 준비 조치는 6월 24일에 최종 완료되었다고 한다. 인민군은 6월 24일 24시에 공격개시선으로 진입하였고 군사작전은 4시 40분 개시되었다. 작전이 개시된 뒤 3시간 후 각 부대와 군단은 이미 전방으로 3~5km를 진격해 나갔다.<sup>15</sup> 1950년 6월 25일 당시 북한군 전력에 대한 소련의 보고에 의하면 인민군 총 병력은 18만 8천명으로 파악되었다.<sup>16</sup>

<sup>13</sup> 국사편찬위원회(편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 1949년 9월 15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 44~45.

<sup>14</sup> 필리포프(Filippov)는 소련의 일급비밀 문서에 사용된 스탈린의 암호명이다. 국사편찬위원회(편역), “소련외무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전문, 남북조선의 통일을 착수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 통보하는데 대하여, No. 8600, 1950년 5월 14일 5시 30분,”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 58.

<sup>15</sup> 국사편찬위원회(편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 준비와 실행(1950.6.26),”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 62~63.

북한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고 9월 중순 낙동강 전선까지 진격하였으나 9월 15일 UN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선은 다시 북상하였다. 조선인민군은 북중국경선까지 후퇴하며 패전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선은 다시 남하하게 되었다. 조·중연합군은 12월 말경 38선을 재차 남하하여 1951년 1월 서울을 재점령 하였다. 그러나 2월 중순경부터 조·중연합군의 공세는 둔화되었고 전세를 다시 역전한 UN연합군과 한국군은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불과 7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점령과 피점령의 상황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은 물적, 인적 피해가 가중되었고 상호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된다.

### 3. 휴전협정의 체결

UN연합군과 조·중연합군이 38선을 기준으로 다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과 소련은 휴전을 모색하게 된다. 미국은 1951년 5월 주소련 미국대사였던 케난(George Kennan)이 개인자격으로 소련의 유엔 수석대표였던 말리크를 만나 미국 정부의 뜻을 전달하였다.<sup>17</sup> 소련과 중국은 미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의견을 조율하였다. 양국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협상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상정하는데 동의하였다. 김일성 또한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면담하고 휴전협상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sup>18</sup> 결국 협상은 말리크가 6월 23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휴전과 38선에서 양측군대의 철수를 논의하기 위한 휴전협정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개시되었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첫 휴전회담이 개최된 이후 길지 않은 시간내에 종결될 것으로 예측됐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38선을 중심으로 쌍방간 공방전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조속한 협상체결을 원했으나 협상의 지연으로 휴전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2년 여간 미공군의 지속된 공중폭격에 시달려야 했다. 휴전협상 개시 5개월 만에 포로교환 문제를 제외하고 여타문제에서 진전을 보았으나 이후 1953년 7월 까지 협상은 장기화 되었다.<sup>19</sup> UN연합군과 조·중연합군은 1951년 7월 10일부터

<sup>16</sup> 소련은 전쟁발발 당시 북한군의 전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950년 6월 25일 현재 북조선군대의 전력; 보병사단 - 10개, 병력-175,200명; 비행사단-1개, 병력 - 2,800명, 비행기-226대; 함대-4개, 병력-1만 명; 조선인민군 총병력-18만8천 명; 남조선군 총병력-11만1천 명.

<sup>17</sup>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 협정의 비밀협상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1987), pp. 256~267.

<sup>18</sup>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 697~704.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각종 회담을 개최하였다.<sup>20</sup> 결국 미국과 소련에서 새로운 지도체계가 성립된 1953년 1월 이후 양측은 휴전협상의 종결을 위한 합의에 다다르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彭德懷)를 다른 일방으로 하는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동 정전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司令員)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Korea)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식으로는 이 협정의 마지막 문구를 따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또는 ‘군사정전협정(Military Armistice Agreement)’ 이라 칭한다.<sup>21</sup>

지금까지 기술한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은 한국전쟁의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던 소련의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 III. 한국전쟁에 관한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

이 논문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북의 역사서술에 있어 가장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① 전쟁의 원인, ② 전시폭력, 그리고 ③ 휴전체제의 성립에 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 1.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한 인식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서술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누가 침략했는가하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다. 국제사회의 인식과 달리 북한은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부정하고 ‘미제국주의’의 북침을 현재까지도 ‘역사적 사실’로 교육·선전하고 있다.

<sup>19</sup> 김일성, “조선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위하여”(1952.8.15), 『김일성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p. 221 ~ 222.

<sup>20</sup>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서울: 집문당, 1998), p. 167.

<sup>21</sup> 이상면,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2호 (2007), p. 248.

## 가. 남한의 인식

한국정부가 통일교육을 위해 만든 ‘통일교육지침서’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교육,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 <2014 통일교육지침서>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사회교과(역사영역) 지도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6·25전쟁의 원인 및 피해상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 평화통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초등학교) 6·25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중학교) …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 등을 탐구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이해시키도록 한다.”<sup>22</sup>

한국전쟁에 관한 남한 공간물의 역사서술은 전쟁의 원인을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북한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소련과 중국의 협조 내지 지원이 있었음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남침 전쟁준비에 들어갔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군사 비밀협정을 맺었고 남침을 위한 북한군의 역량을 강화했다. 소련으로부터는 탱크와 야포, 항공기 등 당시의 최신 무기를 도입해 전면 공격을 준비했다. … 중국으로부터 1949년과 1950년 사이에 중국의 국공내전 등의 전투 경험이 있는 조선인 수만 명을 북한군에 편입시켜서 북한군의 전력을 강화해 나갔다. …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휴일 새벽, 선전포고도 없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전차를 앞세운 기습 남침을 개시했다.”<sup>23</sup>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은 좀 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히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북한의 침략을 넘어 해방 이후 진행된 분단상황을 드러냄으로써 구조적 원인 또한 드러내고자 하였다.<sup>24</sup>

“1948년 8월과 9월에 각각 남한과 북한은 단독 정부를 수립하였다. … 남쪽의

<sup>22</sup> 통일교육원, 『2014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4), p. 19.

<sup>23</sup>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4), pp. 174~175.

<sup>24</sup>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서술은 개별 교과서에 따라 일정부분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관련한 정부의 집필기준에서도 변화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단과 전쟁’ 주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 기준의 변천에 관해서는 차승주 (2013), pp. 113~114 참조.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서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가 되면 상대 지역에 자신의 체제를 확대하여 통일 국가를 완성하고자 하였다.”<sup>25</sup> “남한과 북한은 제각기 북진통일과 적화통일을 내세우고 서로 대립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을 빚고 있었다.”<sup>26</sup>

또한 한국전쟁이 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등장한 냉전체제의 중심에 있었던 는 점에서 세계사적 흐름 속에 한국전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은 중국과 소련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 방어선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애치슨 선언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sup>27</sup> “38도선이 그어지고 6·25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한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 …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38도선을 경계로 벌어진 교전만 500회를 넘겼다. 옹진 지역에서만 이미 전사자가 6,000여 명을 넘었다.”<sup>28</sup> “6·25전쟁은 1945년 이후 진행 중에 있던 세계적 규모의 냉전체제구축의 가장 뚜렷한 상징적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됐다.”<sup>29</sup>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관한 남한의 역사서술은 ① 한반도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침략임을 강조하고, ②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리고 ③ 해방 이후 남북의 분단과 대결, 그리고 냉전체제라는 구조적 조건을 일부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나. 북한의 인식

한국전쟁의 발발에 관한 북한의 역사서술은 한국의 그것과 정반대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해 남한의 군대가 6월 25일에 38선

<sup>25</sup> 서강식 외, 『중학교 도덕 2』 (서울: 두산동아, 2011), pp. 174~175.

<sup>26</sup>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미래엔컬처그룹, 2011), pp. 342~343.

<sup>27</sup>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리베르스쿨, 2014), p. 343; 한편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금성출판사, 2014), p. 377에서는 애치슨 선언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외교정책이었으나 동 성명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큰 혼선”을 불러일으켰다고 기술되어 있다.

<sup>28</sup>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주), 2014), p. 278.

<sup>29</sup>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이해』, pp. 177~178.

전역에 걸쳐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진공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매국 역적 리승만 괴뢰정부의 군대는 6월 25일에 38선 전역을 걸쳐 38이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진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용감한 공화국 경비대는 적들의 진공을 항거하여 가혹한 전투를 전개하면서 리승만 괴뢰정부 군대의 진공을 좌절시켰습니다. … 인민군대는 공화국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적들을 38이북 지역으로부터 격퇴하고 38이남 지역으로 10~15킬로미터까지 전진하였습니다.”<sup>30</sup>

북한은 한국전쟁이 남한의 치밀한 “《북벌》작전계획”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미 군사고문단장(로버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 작전계획에 관한 내용은 전쟁발발 이후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전 내무부장관 김효석이 증언했다는 것이다.<sup>31</sup>

“미제의 조종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침략 전쟁을 준비하여 온 리승만 역도들은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 괴뢰 국방군으로 하여금 용진, 해주, 금천, 철원 방향으로부터 38선 전지역에 걸쳐 공화국 북반부를 불의에 배신적으로 침공하였다.”<sup>32</sup> “《북벌》군사작전은 1949년 7~8월경에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동시에 전개하기로 되었다. … 1950년 6월 28일 서울해방 당시 육군본부에서 압수해온 《북벌》작전지도는 김효석의 증언의 정확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었다.”<sup>33</sup>

결국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침략에 대응하여 북한은 ‘김일성의 뛰어난 영도’에 따라 반격에 나서 침략을 격퇴하고 38선 이남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뛰어난 전법과 전선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인민군 장병들은 도망치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불벼락을 안기면서 진격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침략군의 주력과 남조선괴뢰군의 기본집단을 때려부시고 적들을

<sup>30</sup> 김일성, “전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1951~1952年』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pp. 13~14.

<sup>31</sup> 이와 같은 1949년의 “《북벌》작전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1950년 38선 돌파작전으로 계획이 수정되어 감행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효석의 증언내용과 《북벌》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회과학원(1988), pp. 250~26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a), pp. 25~42.

<sup>32</sup> 교육도서출판사, 『조선력사: 고급 중학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p. 108.

<sup>33</sup> 사회과학원, 『현대조선역사』 (서울: 일송정, 1988), pp. 250~251.

조선동남쪽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부대들은 전쟁이 시작되지 불과 한달 남짓한 사이에 남반부지역에 90프로 이상과 인구의 92프로 이상을 해방하는 빛나는 전과를 이룩하였다.”<sup>34</sup>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도체계가 확립된 이후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침략자로 강조하고 한국전쟁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따른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제가 도발한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제패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침략전쟁이었다. 반면에 미제와 이승만정권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전쟁은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었다. …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전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인민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이었다.”<sup>35</sup>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한 시기 북침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갖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다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반격이 이루어졌고 급속히 인민군이 남하하였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36</sup>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하여 북한은 ① ‘이승만 괴뢰정부’가 한반도를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침략하였으며, ② 미국의 지시하에 <북벌>계획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③ 김일성의 영도로 이를 격퇴할 수 있었다고 서술한다. 다만 한국전쟁 발발 당시 김일성의 연설은 침략자로 ‘이승만 괴뢰정부’를 강조한 반면, 전후 ‘미제’가 그 침략의 주체로 강조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 2. 전시폭력에 대한 인식

한국전쟁 초기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전선이 이동함에 따라 남과 북은 상호 점령과 피점령, 그리고 재점령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쟁의 전개양상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광범위한 전시폭력으로 나타났다.

<sup>34</sup>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p. 133.

<sup>35</sup> 사회과학원, 『현대조선역사』, p. 273.

<sup>36</sup> 탈북자 A: 무산출신-2014년 탈북(인터뷰: 2015.8.15)

## 가. 남한의 인식

전시폭력에 대한 남한의 인식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전시폭력, 특히 민간인 학살의 구체적인 행위주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6·25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전체 인구의 6분의 1인 약 500만 명에 이르렀다. … 남북 양쪽에서 수많은 주택, 공공건물, 학교, 농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6·25 전쟁 중 북한 측은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인민재판을 행했고, 남한 측은 수복한 지역에서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처벌하였다. 점령과 수복의 과정에서 처벌과 보복이 자행되어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경남 거창, 충북 영동의 노근리, 황해도 신천 등지에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다.”<sup>37</sup>

일부 한국사 교과서는 인민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읽기자료의 형식으로 인민군대에 의한 공개처형, 그리고 미군의 민간인 발포에 관한 내용을 회고문헌과 증언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sup>38</sup>

“전쟁 중에 양측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 북한군은 지주와 자본가, 군인 및 경찰 가족들을 처형하고, 퇴각하면서 수많은 지식인, 정치인 등을 끌고 갔다. 국군과 경찰은 좌익 출신의 보도 연맹 소속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하였다. 충북 영동의 노근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미군의 총격 또는 폭격에 죽거나 다쳤다. 전선이 변할 때마다 상대방에 협조하였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보복도 전개되었다.”<sup>39</sup>

전시폭력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로 있다가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sup>40</sup>

“6·25전쟁이 끝나갈 무렵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sup>37</sup>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p. 344.

<sup>38</sup>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삼화출판사, 2011), p. 322.

<sup>39</sup>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p. 282.

<sup>40</sup> 우리정부는 2007년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3년 12월 현재 2,560명을 납북자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했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재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시 남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 등을 고려하면 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sup>41</sup>

전시폭력에 관한 남한의 역사서술은 한반도 전체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의 참혹상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폭력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역사 검증의 한계에 기인한 문제라 생각된다.

## 나. 북한의 인식

전시폭력에 관한 북한의 역사서술은 폭력의 잔혹성을 드러내고 폭력행위의 주체로서 ‘미제침략자’를 지명함으로써 역사교육의 핵심 주제로 강조하고 있다. 전시폭력에 관한 북한의 역사서술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 대부분의 도시에 감행된 공중폭격과 민간인의 학살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제의 《초토화작전》은 조선에서 자란 모든 생명체와 조선에 있는 모든 유형물을 철저히 소멸할 것을 목적으로 한 20세기 식인종들의 전범이었다. … 수십수백만개 폭탄과 수억개의 기총탄을 퍼부어도 조선인민을 굴복 시킬 수 없었고 인민군대를 《교살》할 수 없었던 미제는 비열하게도 세균전을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sup>42</sup>

북한은 피점령 기간에 ‘미제’에 의해 자행된 학살로 인하여 평양에서 1만 5,000여명, 은률에서 1만 3,000여명, 양양에서 2만 5,300여명, 평산에서 5,290여명, 벽성에서 5,998여명, 송화에서 5,545여명, 안주에서 5,000여명이 학살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전략적 후퇴시기 우리 인민들은 미제의 야수적인 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미제침략자들은 강점지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sup>44</sup> 1950년 11월 초 황해도 안악

<sup>41</sup> 통일교육원, 『2014 통일백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4), pp. 111~117.

<sup>42</sup> 사회과학원, 『현대조선역사』, pp. 315~316.

<sup>43</sup> 사회과학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6』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b), pp. 129~130.

군 안악면 신창리에서는 약 1,000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생매장하였다. 함경북도 학성군 학남면에서는 28명을 휘발유를 뿌리고 산채로 태워 죽였다. 황해남도 송화군 운유면에서는 로동당원의 가족이라 하여 4~8세 되는 어린이 70명을 포함한 200명의 부인과 아동들을 과수원 창고에 몰아넣고 굶겨 죽였다.<sup>45</sup>

신천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북한이 한국전쟁의 잔혹성을 통해 반미의식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역사적 사건으로 강조되고 있다.<sup>46</sup>

“미국 침략군은 민족 반역자들인 <치안대>, <멸공단>과 공모하여 대중적 학살을 조직하였다. 황해도 한 도에서만 무려 12만 명의 인민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신천에서만 하여도 1950년 10월 18일에 900명, 19일에 320명, 20일에 520명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 전체 주민의 4분지1에 해당하는 3만 5,383명을 살육하였다.”<sup>47</sup>

북한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자료의 한계와 현지방문의 어려움으로 북한정부의 주장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 학계에서도 북한이 서술하고 있는 학살사건 중 일부는 우익인사에 대해 인민군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건들에 관해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여전히 요원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형성된 반미의식이 전쟁을 통해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기반하고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할 것이다.<sup>48</sup> 북한은 전시폭력, 즉 공중폭격과 모든 학살의 주체를 ‘미제’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의 역사서술에 있어 남한지역에서 인민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지워져 있는 현실이다.

### 3. 휴전체제의 성립에 대한 인식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체결과 함께 남과 북은 소리 없는 전쟁을 지속해

<sup>44</sup>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 p. 136.

<sup>45</sup> 장종엽,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7), pp. 54~55.

<sup>46</sup> 신천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연구로는 한모니가, “‘봉기’와 ‘학살’의 간극: 황해도 신천사건,”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서울: 선인, 2014).

<sup>47</sup> 장종엽,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pp. 54~55.

<sup>48</sup> 김귀옥,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당과 인민대중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p. 340.

왔다. 그렇다면 휴전협정의 체결, 그리고 휴전체제의 등장에 대한 남북의 역사적 인식은 어떠했나?

### 가. 남한의 인식

휴전협상은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UN연합군을 대표한 미국이 협상주체가 되어 진행되었다. 휴전협상의 한국참여 문제는 전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sup>49</sup> 휴전협상과 협정의 체결에 관한 남한의 역사서술은 한국의 참여문제를 드러내기 보다는 휴전협상 자체를 기술하는 정도로 정리되고 있다.

“승부 없는 전쟁이 지속되자 마침내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교환의 방식을 두고 양측은 지루한 협상을 계속하였고, 회담은 2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던 양측은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 협정에 서명하였다.”<sup>50</sup>

휴전에 관한 남한의 역사서술은 휴전협상 보다는 휴전체제와 그에 따른 분단의 지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통해 중지됐지만, 그것은 이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전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됐다.”<sup>51</sup>

또한 전후 한반도가 미소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남과 북의 대결이 지속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한국전쟁은 북한의 침략으로 발발하여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고통을 지속시킨 전쟁으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sup>49</sup> 일부 교과서는 “이승만이 휴전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pp. 344~345.

<sup>50</sup>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2011), p. 326. 다만 김종수 등은 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한국은 전쟁 당사자였지만 휴전 회담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종수 외 (2014), p. 380.

<sup>51</sup>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이해』, p. 170.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적·물질적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분단은 남북한 간 대결구도를 지속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 및 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분단 상황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 경쟁과 체제 경쟁을 유발하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 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다양한 경제적 부대비용을 초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 추동력을 제약하였다.”<sup>52</sup>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통일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단체제하에서 안보와 통일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6·25전쟁은 승자 없이 아무런 실리도 얻지 못한 전쟁으로서 남북 분단을 오늘날까지 고착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6·25전쟁의 교훈을 통해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sup>53</sup>

남한의 역사서술에서 휴전협정의 체결은 승자 없는 전쟁의 결과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전쟁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나. 북한의 인식

북한은 휴전협상에 관한 서술에 있어 북한과 미국의 협상구조를 강조하고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킨 협상, 즉 승리의 회담임을 강조한다.

“조선정전담판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방으로 하고 제국주의 두목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타방으로 하는 국제적인 회담이었다.”<sup>54</sup> “막다른 궁지에 빠진 미제는 할 수 없이 주체42(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다.”<sup>55</sup>

<sup>52</sup> 통일교육원, 『2014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 p. 29.

<sup>53</sup> 서강식 외, 『중학교 도덕 2』, pp. 175~176.

<sup>54</sup>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7』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c), p. 25.

<sup>55</sup>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 p. 147.

“조선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이 전인민적인 영웅적투쟁을 벌려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제국주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자기 조국을 수호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었습니다. … 3년 1개월 여에 걸친 가혹한 전쟁에서 조선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19개의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격파하고 위대한 력사적 승리를 전취하였다.”<sup>56</sup>

특히 북한의 역사교과서와 공간역사서들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쟁취한 승리임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역사를 뒤집은 것이다.

“조선에서의 정전의 실현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16개국 무력간섭자들과 이승만정권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의 치욕스러운 패배였다. 미제는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100여년의 침략사에서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협정에 조인하였다.”<sup>57</sup>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 전국토가 파괴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통해 조국을 지킨 영웅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조선에서의 정전의 실현은 우리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외래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미제의 앞잡이 리승만매국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린 영웅적 투쟁의 결과 얻어진 것이었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강대한 적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쟁취한 력사적 승리였다.”<sup>58</sup>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sup>59</sup>

북한의 역사서술에 있어 휴전협정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켜낸 결과물로서 강조되고 있다. 결국 한국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란 명제, 그 승리는 김일성의 영도에 의해 가능했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sup>56</sup> 교육도서출판사, 『조선력사: 고급 중학교용』, p. 225.

<sup>57</sup> 사회과학원, 『현대조선역사』 (서울: 일송정, 1988), p. 331.

<sup>58</sup>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7』, p. 509.

<sup>59</sup> 위의 책, p. 515.

## IV. 역사인식의 간극: 원인과 해소방안의 모색

이 논문에서는 남북 간 존재하는 역사인식의 간극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① 휴전체제의 지속, ② 역사적 검증의 문제, 그리고 ③ 전쟁에 관한 역사교육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1. 휴전체제의 지속과 평화체제의 모색

남북 간 존재하는 역사인식의 간극은 한반도의 분단구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속되어 왔다. 한국전쟁이 휴전의 형태로 종결됨에 따라 남북은 안보에 기반 한 남북관계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었다. 휴전체제하에서 남북의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한 쌍방은 휴전이후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교섭을 명문화한바 있다. 휴전협정문 제4조는 쌍방 관계정부들에게 정치적 협상을 제안함으로써 휴전체제 이후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sup>60</sup>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쌍방간 외국군대의 주둔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했다. 휴전협정은 쌍방 간의 무력충돌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전이후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은 휴전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휴전선과 해상, 특히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을 지속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휴전체제의 지속은 남북한 각각의 체제통합의 정도와 상대방과의 체제 이질성의 정도가 상호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sup>61</sup> 이와 같은 이유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sup>62</sup>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sup>60</sup> 국가정보원(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남북한 합의문건 총람』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 436.

<sup>61</sup>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파주: 나남, 2002), p. 34.

<sup>62</sup> 일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만 평화협정의 체결이 그 자체로 갈등의 종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은 적대적 쌍방간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정체결 당사자간 신뢰와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평화협정은 사문화 될 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에 접근함에 있어 단순한 안보 중심적 접근 방식을 넘어 ‘안보와 경제 협력’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는 비핵화와 군축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할 수 있다.<sup>63</sup> 결과적으로, 평화협정의 체결이라는 결과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 2.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검증의 문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의 역사적 인식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쌍방의 국가와 구성원이 서로 다른 역사적 서술을 사실이라고 믿는 상황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개별적 역사인식을 일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해외자료 또한 소련의 붕괴와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변환 이후 일부 비밀해제 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sup>64</sup>

국내 역사학 연구자들의 회원단체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간 북한 역사학자들과 교류해온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교류사업을 보면 고구려 시기(5건), 개성관련(5건), 일제 식민기(3건), 역사용어 및 기타(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학계의 교류는 2000년과 2007년 개최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sup>65</sup> 이외에도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대북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대북IT학술지 제공 사업,’ ‘6.15민족문화인협회 기관지 『통

마련함으로써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남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적대적 긴장 관계를 초래했던 제반 긴장요인들을 완화·해결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의 실현 상태”를 의미한다.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 프로세스,” 『통일정책연구』, 16권 1호 (2007), p. 83.

<sup>63</sup> 위의 글, p. 98.

<sup>64</sup> 이와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의 해외사료를 번역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소련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편역),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sup>65</sup> 정태현, “남북 역사학(자) 교류와 역사인식의 공존을 향한 전망,” p. 10.

일문학』 발간사업, '북한 전통문화 기록화 사업,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북측 유적·유물 촬영 및 개성문화지구 조사사업, '〈남북학술용어집〉 공동연구개발사업, '〈북한역사유물유적총람〉 발간사업, ' 등이 2001년 이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관한 학술적 접근은 시도되지 못했다.

만약 한국전쟁 등 남북이 교류협력 자체를 꺼리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인식의 간극이 지속될수록 통합의 과정 또한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갑작스런 한반도 통합의 상황이 진행된다면 사회통합에 큰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단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사업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사업과 DMZ 공동보존 및 역사적 사실의 검증 등을 통해 한국전쟁을 화해와 치유의 과정으로 접근함이 옳바르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UN참전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 또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UN 및 유관국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세계평화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sup>66</sup> DMZ의 개발에 앞서 DMZ내 역사 및 문화유적과 생태환경에 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전쟁에 관한 공동의 상처를 치유하고 장기적으로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한 검증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한국전쟁에 관한 교육의 문제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한에서의 전쟁교육이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으로 일부 전환되어 왔으나 이와 반대로 북한의 전쟁교육은 여전히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지속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관한 남북의 인도주의적 접근과 함께 전쟁교육을 평화교육, 통일교육의 틀에서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극단적으로 차별화된 역사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관한 준비가 요구된다. 만약 통일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면 어떠한 대안을

<sup>66</sup>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ikorea.go.kr/trustprocess/sub/learn\\_text.html#textLis05\\_list](http://www.unikorea.go.kr/trustprocess/sub/learn_text.html#textLis05_list)> (검색일: 2015.7.25)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태는 갑작스런 통일의 상황에서 북한지역의 역사교육은 남한의 교과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67</sup> 그러나 이 또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 차별화된 역사교육을 장기간 받은 북한주민에 대해 단계적 역사인식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sup>68</sup>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화교육을 통해 남북의 역사교육이 갖는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실험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증언은 이러한 점진적인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내가 북한에서 교육받은 남한의 ‘북침’에 대한 역사사료들은 지금 한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침’에 대한 사료들만큼이나 매우 생생하였다. 나 또한 남한에 와서 북한이 먼저 침략했다는 자료를 보았지만, 남과 북 모두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내 자신의 생각에 북한이 먼저 침략했다고 추측할 뿐이다.”<sup>69</sup>

한국전쟁에 관한 남북의 교육은 공히 전쟁의 원인과 참혹성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일반적으로 역사교육에서 평화의 문제보다 전쟁을 더 비중 있게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역사교육에서 전쟁은 평화라는 교육의 기본적 가치보다는 승패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왔다. 역사교육에서 전쟁사 학습이 평화교육에 대립적이고 모순되는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여러 측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쟁의 성격, 전쟁의 폭력성, 민중의 주체적 선택, 전쟁 과정의 인과관계, 그리고 전쟁의 기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sup>70</sup>

## V. 결 론

이 논문은 근대 이후의 한반도 역사에 있어 남과 북이 가장 이질적인 역사인식을 공개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한국전쟁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과 북의 역사서술에 있어 가장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① 전쟁의

<sup>67</sup> 이준태, “남북한 역사교육 분석을 통한 역사의식 통합 방안모색,” p. 216.

<sup>68</sup> 이와 관련하여 독일이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 어떻게 역사교육이 진행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무, “동독과 신연방주 역사 교과서의 분단사 서술 비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Vol. 16 No. 3 (2010) 참조.

<sup>69</sup> 탈북자 B: 함흥출신-2014년 탈북(인터뷰: 2015.8.7)

<sup>70</sup> 김한중, “평화교육과 전쟁사,” p. 128.

원인, ② 전시폭력, 그리고 ③ 휴전체제의 성립에 관한 남북 공간문헌의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전쟁의 원인에 있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침략을 주장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의 동의하에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역사서술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전시폭력에 있어 남한은 전쟁의 참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양민학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북한은 모든 폭력의 당사자로 ‘미제국주의’를 지명하고 이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휴전체제의 성립에 대하여, 남한이 ‘승자 없는 종결’로서 휴전체제를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의 지속이란 과제를 강조한 반면, 북한은 ‘김일성의 영도’하에 이루어낸 ‘승리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 간 존재하는 역사인식의 간극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① 휴전체제의 지속, ② 역사적 검증의 문제, 그리고 ③ 전쟁에 관한 역사교육의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한반도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평화협정의 체결이 그 자체로 갈등의 종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호적대적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당사자 간 새로운 협력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단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사업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사업과 DMZ 공동보존 및 역사적 검증작업 등을 통해 한국전쟁을 화해와 치유의 과정으로 접근함이 옳바르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한국전쟁에 관한 교육에 있어 전쟁사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통일된 한반도에서 극단적으로 차별화된 역사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남북의 정부가 간행한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남과 북의 교차점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접수: 10월 19일 ■ 심사: 10월 20일 ■ 채택: 11월 24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 \_\_\_\_\_. 『조선력사: 고급 중학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 국가정보원(편). 『남북한 합의문건 총람』. 서울: 국가정보원, 200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 국사편찬위원회(편역).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김귀옥.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당과 인민대중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 김일성. “1949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1949.1.1).” 『김일성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전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1950.6.26).”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 \_\_\_\_\_. “조선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위하여”(1952.8.15).” 『김일성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주년에 제하여 진술한 방송 연설(1950.9.11).”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금성출판사, 2014.
- 박명림.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최장집(편), 『한국전쟁연구』 서울: 태암, 1990.
- \_\_\_\_\_.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파주: 나남, 2002.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파주: 나남출판, 1996.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_\_\_\_\_. 『조선전사 26』.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_\_\_\_\_. 『조선전사 27』.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사회과학원. 『현대조선역사』. 서울: 일송정, 1988.
- 서강식 외. 『중학교 도덕 2』. 서울: 두산동아, 2011.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주), 2014.
-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삼화출판사, 2011.
- 장중엽.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7.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2011.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리베르스쿨, 2014.
-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4.

- \_\_\_\_\_. 『2014 통일백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4.
- \_\_\_\_\_. 『2014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4.
-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서울: 집문당, 1998.
- 한모니까. “‘봉기’와 ‘학살’의 간극: 황해도 신천사건.” 『한국 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서울: 선인, 2014.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미래엔컬처그룹, 2011.
- 홍정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2. 논문

- 강석승. “남북한의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과 그 특성 비교.” 『북한학보』. 제37권 1호, 2012.
- 권성아.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통일과 평화』. Vol. 3, No. 2, 2011.
- 김상무. “동독과 신연방주 역사 교과서의 분단사 서술 비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Vol. 16, No. 3, 2010.
-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Vol. 53, 2014.
- 김한중. “평화교육과 전쟁사.” 『역사교육연구』. No. 18, 2013.
- 김형곤. “역사교과서와 한국전쟁 사진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1, No. 6, 2011.
-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 협정의 비밀협상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1987.
- 양정훈. “임시정부에 대한 남북한의 견해 차이 비교.” 『한국보훈논총』. Vol. 12, No.4, 2013.
- 윤철기·구갑우, “남북한 대화에서 남북한의 상호인식 변화: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고위급 회담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Vol. 9, No. 1, 2013.
- 이상면.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2호, 2007.
- 이영미. “정치의식의 탈경계 문화 충돌: 남북한 이주 갈등과 역사 인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Vol. 29, 2010.
- 이준태. “남북한 역사교육 분석을 통한 역사의식 통합 방안모색.” 『아태연구』. Vol. 16, No. 2, 2009.
- 정태현. “남북 역사학(자) 교류와 역사인식의 공존을 향한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Vol. 12, 2009.
- 조 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 프로세스.” 『통일정책연구』. 16권 1호, 2007.
- 조성훈. “북한의 6·25전쟁인식과 통일을 위한 유산 청산.” 『선진화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10.
- 차승주. “남북한 교과서의 ‘한국전쟁’ 관련 내용 비교 연구.” 『북한학연구』. Vol. 7, No. 2, 2011.

### 3. 기타자료

Acheson, Dean. "Speech on the Far East." <http://teachingamericanhistory.org/library/document/speech-on-the-far-east>(검색일: 2015.7.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http://www.unikorea.go.kr/trustprocess/sub/learn\\_text.html#textLis05\\_list](http://www.unikorea.go.kr/trustprocess/sub/learn_text.html#textLis05_list)>. (검색일: 2015.7.25.).

탈북자 A: 무산출신-2014년 탈북(인터뷰: 2015.8.15).

탈북자 B: 함흥출신-2014년 탈북(인터뷰: 2015.8.7).

Abstract

## A Comparison of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Korean War

*Il-Young Jeong*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is a historical event determin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Korean War drove Socialistic doctrine in north Korea and the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Political powers in the Korean peninsula, seek to win the historical legitimacy.

The Cold war, in Korean peninsula, is still working in historical understanding of south and North Korean. Gaps of the recognition about the Korean 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can be resolved from understanding each other. From the understanding what happened in the Korean War, we should teach in a views of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ey Words:** Korean War, Historical Understanding, South Korea, North Korea, Peace Regime

